

탄소배당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생태적 전환의 도구로서 기본소득”

이건민

계간《기본소득》
편집위원

다그마 파터노가의 발표문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 소득의 도입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 경제 성장, 기술 진보, 생태적 근대화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면서 이와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울러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계속해서 의존해도 된다는 생각이 인류의 미래에 재앙적이라는 것,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사회·생태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우선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기본소득 Grundeinkommen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힌 보편적 기본배당allgemeine Grunddividende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전 지구적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본소득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관한 보충 설명을 요청드린다.

다음으로 준비한 토론은 탄소배당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하는 작업과 관련한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토론자에게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는 것, 소득분포가 더 평등해지고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이 줄어든다는 것,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효과는 기본소득의 자원 조달 방식에 따라 그 크기 면에서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재원 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그 방향 면에서는 일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탄소세와 탄소배당을 결합한 정책에 대해서조차 다양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람들은 탄소세와 탄소배당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고함으로써, 탄소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배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기제로서 탄소배당을 바라보면서 탄소배당을 비판한다. 둘째, 탄소세가 내세우는 정책목표를 고려해보았을 때 탄소세수 중 전부 혹은 적어도 일부는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활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당위론적 입장에서의 반론이 존재한다. 셋째, 화폐적 효용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기술 개발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가 낳는 비화폐적 효용, 예컨대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토양, 쾌적한 환경 등이 가져오는 양陽의 효용까지 고려될 경우, 탄소세수 중 탄소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탄소세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탄소세의 역진성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의 반론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반론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에 관한 프레이밍,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의 논증 구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의식, 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해당 정책에 관한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해당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탄소세-탄소배당 정책에 관한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문제에서, 실제로 개인이나 가구가 이러한 계산에서 화폐적인 측면과 더불어 비화폐적인 측면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지, 만약 고려한다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에 포함하는지, 탄소세수 중 탄소배당의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